



보도일시 (인터넷) 2026. 5. 18.(월) 11:00 (지면) 2026. 5. 19.(화) 조간 배포 2026. 5. 18.(월) 06:00

변화하는 보안환경 대응을 위해 16년 만에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

- 보안 인력 확보, 시설·장비 개선, 무인항공기 대응 체계 구축 등에 활용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올해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항만시설 보안료 상한 변경 사항 >

구분	선박(톤)	화물				여객(명)
		컨테이너 (TEU)	일반화물 (톤)	액체 (10배럴)	공'컨.환적	
현행('25년)	3원	86원	4원	5원	면제	120원
변경('26년)	5원	145원	7원	8원	면제	200원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을 고용하고 보안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에는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에 필요한 비용의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항만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불법 드론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료는 해외 주요 항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부산항 기준, 중국은 4.6배, 네덜란드는 70배 수준의 보안료 징수

이에 해양수산부는 적정한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의 보안 원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로 부족한 보안 인력의 확보와 보안시설·장비의 개선 등이 이뤄지고,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위협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응 시스템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은 선사, 화주, 여객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라며,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항만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51-773-5790)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51-773-5795)

